

[142차 노동포럼]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

-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 14:00-17:00
- 장소: 서울 상연재, 컨퍼런스룸 8
-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시간	내용	비고
13:30 ~ 14:00	행사안내	행사 담당자
14:00 ~ 14:10	개회 및 인사말 외(내빈소개)	사회자
14:10 ~ 16:50	<p style="text-align: center;">< 발표 ></p> <p>1. 울산지역 사회연대활동 확대 전략 - 허인 (한양대학교 겸임교수)</p> <p>2. 노동조합 주도 재단(기금)의 유형과 함의(한국, 캐나다, 독일) -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p> <p style="text-align: center;">< 패널토론 ></p> <p>1.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p> <p>2.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실장</p> <p>3.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p> <p>4. 현광훈 공공운수노조 연대사업실장</p> <p>5.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p> <p>6. 한석호 전태일재단 기획실장</p> <p style="text-align: center;">< 종합토론 ></p>	<p>사회자</p> <p>발제자</p> <p>토론자</p> <p>청중</p>
16:50 ~ 17:00	폐회선언	사회자

목 차

발제1. 울산지역 노동조합의 사회연대활동 확대전략	1
허인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발제2. 한국, 독일, 캐나다의 재단/기금 사례	23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1. 노동운동이 사회연대전략으로 나아 갈 방향	37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토론2.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사업과 노동운동	41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실장	
토론3. 사회 대개혁과 사회연대 활성화를 위해 노동조합이 나서야	45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토론4.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51
현광훈 공공운수노조 연대사업실장	
토론5. 한국사회 사회적 연대의 맥락과 의미	59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6. 노동조합 사회연대전략의 의미	69
한석호 전태일재단 기획실장	

발제1.

울산지역 노동조합의 사회연대활동 확대전략

허인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울산지역 노동조합의 사회연대활동 확대전략

허 인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발표 순서

2

- 지역사회와 사회연대활동의 관계
 - 울산지역 노동운동의 변화 과정
 - 지역사회에서의 노동운동의 역할
- 사회연대활동의 흐름
 - 기업, 민주노총, 금속노조
- 사회연대활동 사례
 - 부산노동자생협, 금속노조 경남지부,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운분투재단
 - 강서양천민중의 집, (사)희망씨
- 민주노총 울산지역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 시사점
 - 성과와 전망
 - 사회연대활동센터의 조직설계

지역사회와 사회연대활동의 관계

- 울산지역노동운동의 변화 과정 -

3

배경
전개
저항과반격
현재

울산지역은 오랜 기간 노동운동의 메카로 인식되어왔음(전투성과 집단성이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 -> 1970년대 중후반 현대계열 기업 노동자 중 80%가 울산에 집중
- 석유화학(남구), 1차금속(울주), 자동차(북구), 조선(동구)로 집중화 → 주거지(생활공간) 집중화

87년 노동자 대투쟁(임금인상, 두발자유화, 식사개선, 민주노조건설)
- 생존권적 요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전국적 기준이 되었고, 사회민주화 과정과 맞물려 세력집단이 됨

90년대 자본의 '신경영전략(자본의 헤게모니 전략)'

생산영역(사업장)	재생산영역(생활공간)
- 노조배제 → 노조지배	- 자가보유율 확대 등 기업복지 강화
- 노조의 기업 내부화 유도	-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 사내하청제도 도입(인건비 절감, 유연성확보)	- 이데올로기 영역 공세 강화

- 98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안정 이슈에 매몰 -> 기업 이슈에 집중
- 노동계급 분절의 가속화 -> 대공장 정규직은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

지역사회와 사회연대활동의 관계

- 민주노조진영의 사회연대활동 변화 과정 -

4

민주노조 진영의 전략(양날개 전략)

- 산별노조 건설: 대공장 사용자의 미참여, 내부적 갈등 지속, 여전히 건설 과정
- 정치세력화: 분당, 당 내 노동의 집단적 힘 미약.

서구사례

- 산별제제가 미흡한 영국과 미국노동운동은 노조 재활성화 전략으로 서비스모델에서 조직화 모델로 전환(운동노선으로 사회운동적노조주의, 공동체노조주의로 전환)
- 주요 문제의식: 1. 기존 제도화를 통한 대의제 중심 활동으로 활력이 떨어진 한계 극복

2. 제도화에 따른 임금, 노동조건 결정이 용이해짐에 따라 노조 존재감 과시, 다른영역에서의 노조 역할을 위한 의제의 확대

조직동원과 의제확장의 관계

- A: 조합원만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조합원 동원 없이 집행부가 사안 해결
- B: 조합원 동원없이 집행부가 주력, 의료, 교육 등의 지역의제에 개입
- C: 조합원 동원에 의존하여 조합원만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
- D: 조합원 동원에 의존하여 광범위한 시민사회의제 해결을 추구

		의제 범위	
		좁음	넓음
조합원 동원	각	A	B
	원	C	D

지역사회와 사회연대활동의 관계

- 민주노조진영의 사회연대활동 변화 과정 -

5

· 울산지역의 지역연대활동

- 93년 현대중공업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 저지 운동, 95년 한국티타늄공장의 은산공단 입단 저지투쟁
- 96년 석계골프장 건설반대 운동, 96년 울산시 버스요금 인상반대 운동, 97년 울산-연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반대

· 98년 이후

- 사업장의 고용안정 이슈에 집중되고 자본의 헤게모니 강화 후 '사회공헌' 사업으로 중심 이동

· 타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

- 서울시, 성남시 등 지자체가 노동·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다양한 복지를 지원(노동복지센터 건립 등)
- 최근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노동회의소**는 독일 일부 지역과 오스트리아에서 제도화된 모델로 노동조합 대신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와 협력관계를 통해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
-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노동의 조직화와 세력화를 둘러싸고 각 주체 사이에 지열한 각축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지역사회와 사회연대활동의 관계

- 지역사회에서의 노동운동의 역할

6

· 지역사회 의미와 계급 정체성

- 지역사회(local community)는 일반적으로 지리적, 행정적으로 나누어진 일정 지역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장을 의미.
- 울산은 생산현장과 생활공간이 같은 지역인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의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옴
- 생산현장과 생활 공간이 같은 경우 노동자는 경제적으로는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 사회적으로는 시민, 정치적으로는 유권자로 동시에 자리매김 됨.
- 그러나 현실은 사업장 내에서는 집단적 힘을 통해 임금인상과 사내 복지를 개선해 온 반면 사업장 밖에서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개별적인 존재로서 행동해 왔다는 것임. 즉, 작업장 안에서의 단결을 통한 계급정체성을 강조하고 실천해 왔지만 작업장을 나서는 순간 계급정체성은 사라진다는 것임.
- 계급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산물이고, 개인의 매일 매일의 생활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역사적 문화적 산물(Tompson, 1967)

· 노조의 역할

- 노조는 시장행위자, 시민사회 참여자, 계급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시장에서는 자본, 사회에서는 타 계급, 계급관계에서는 체제 또는 국가가 대항관계임
- 한국사회에서 노조는 주로 노동시장 중심의 활동양태를 보여 왔음.
- 향후 적극적 시민사회 참여자로서 행동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대안적 계급관계를 지향해야



지역사회와 사회연대활동의 관계

- 지역사회에서의 노동운동의 역할

7

• 지역사회(시민사회)와 노동의 헤게모니 전략



사회연대(사회공헌) 활동의 흐름

- 기업 -

8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의 강화 흐름

- 기존의 수익성 극대화만을 추구하던 기업의 상이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현대사회의 변화과정에서 기업도 사회의 한 존재로서 법적, 윤리적, 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확대된 결과
- 1950년대 이전 : 자선 활동을 의미
- 1960년대 : '기업시민'이라는 개념이 등장(기업 또한 마치 모범적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인도 바르게 행동해야)
- 2010년 11월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국제표준으로 ISO 26000 제정 발표
(① 조직지배구조 ② 인권 ③ 노동관행 ④ 환경 ⑤ 공정운영관행 ⑥ 소비자 보호 ⑦ 지역사회 참여와 개발)

• CSR 논쟁점

반대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 주어질 역할은 이익을 내는 본업에 충실해 하는 것이며 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 만큼 다른 비용들 중 가시적 주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비용은 생산하는 제품 가격에 전가되어 가격이 올라 결국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새로운 고용창출에 실패하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협력해야 하므로 기업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경우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기업의 비용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전체의 발전이 기업의 발전에도 유리하다

사회연대(사회공헌) 활동의 흐름 - 기업 -

9

• 한국사회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의 강화 흐름

- 1939년: 삼양사가 ‘장학재단’ ‘양영회(현 양영재단)’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
- 1970년대까지 장학재단 설립을 통한 장학 사업이 국내 기업들의 주요 사회공헌활동이었음
- 1980년대 들어서 기업재단 설립이 확대되면서 사회공헌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됨.
그러나 초기 활동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이라기 보다는 일회성 기부형태가 대부분이었음.
-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공헌사업이 활성화 된 것임. 이에 따라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기업들이 증가하였고 그 영역도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서 인적 봉사 로 확대되어 감.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영역(교육 사업, 의료, 보건, 문화, 예술, 기부, 자원 봉사, 기타 활동)

• 최근의 흐름

- 기존의 사회공헌활동들이 기업의 자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형태라면, 최근에는 지역사회 자체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로 사회공헌 활동이 진화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영업 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을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며, 의사 결정 시에 근로자, 서비스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주주, 이해관계자 참여도 등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음.

사회연대(사회공헌) 활동의 흐름 - 기업 -

10

◆ SK텔레콤 “행복나누는 도시락 센터”

저소득층을 고용해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반 사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사회공헌센터에서는 사회공헌에 대한 매칭 및 각종자료를 망라하여 운영하고 있음



사회연대(사회공헌) 활동의 흐름 - 민주노총 -

11

- 90년대 초반: 전노협 시기에는 중소기업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노협 활동이 전개되며 지역성에 기반 함. 그러나 90년대 중반 대규모 사업장들이 민주노조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민주노총이 건설되며 지역기반의 노동운동은 퇴색되어감으로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모색도 쉽지 않게 되었음
- 2002년 무렵 일부 단위노조나 산별노조에서 사회연대기금의 의제가 제기되면서 단체협약으로 사회연대기금(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하는 곳이 남. 이러한 흐름에서 민주노총은 2003년 '연대기금 조성방침'을 확정하였고 정규직조합원 임금 중 일정액을 적립해 비정규직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산별단위 기금을 조성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
- 2006년에 사회연대활동은 당시 민주노동당이 제안했던 사회연대 사업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논의와 논란의 핵심이 됨
- 2009년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는 "산별중심성이 강조되어 온 과정에서 지역본부의 현장에 대한 권한과 개입력은 급속히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하며 "지역은 노동계급의 일터이자 삶터로서 작용하며 이와 결합한 정치투쟁과 집권운동의 장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지역본부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빠르게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본부 강화방안 마련
-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① 지역본부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와 조직운영 정비 ② 지역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사업 강화 ③ 대지자체 교섭과 투쟁 강화 ④ 일터와 삶터를 결합시킨 민주노총 일상적 지역사업 전일 창출 ⑤ 산별노조 지부(본부), 민주노총지역본부(지부), 진보정당지역위원회의 삼각사업체계 구축을 제안
- 2015년에 민주노총은 사회연대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연대활동의 사회적 확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함.

사회연대(사회공헌) 활동의 흐름 - 민주노총 -

12

구분	연대 기금	사회연대 전략	사회연대노총	사회연대운동
시기	2003~2004년	2006~2007	2009	2015~
주제	산별/대공장중심	민주노동당 제안	총연맹	사회연대위원회 지역의 노동조합
내용	비정규직 차별해소 고용안정 등	저임금,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미조직비정규직조직 화 대지자체교섭 지역생활연대운동	지역, 생활연대
기금	(노동)연대기금	국민연대기금	미조직비정규기금	사회연대기금 등
자원	사용자, 노사정, 노사 공동	노동자의 연금급여 인하분 등	조합비의 일부	노동자/노사공동

• 평가

- 민주노총의 사회연대활동의 흐름은 초기에는 생산영역에서의 계급 내 연대를 주요 테마로 하는 '고용연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후 민주노동당의 제안에 따라 '복지연대'로 초점이 옮겨지며 계급 간 연대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010년 이후에는 다시 '지역연대'와 '생활연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며 조합원의 주체화에 보다 무게중심이 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사업은 사회연대위원회의 조직체계나 활동이 산별이나 지역본부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결과적으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연대 사업은 기존 노조단위의 일상사업과 같이 지속되는 반면, 그 외 사업은 예전 대외협력사업에서 수행되었던 활동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사회연대(사회공헌) 활동의 흐름
- 금속노조 -

13

지부	사업명	시작연도	기금조성방식	주요사업	예산규모
현대차	사회공헌 기금	2004년	전액 사측 출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애인 지역사회노인 사회적 약자 지원	50억(2013년부터)
경주 지부	사회공헌 기금	2012년	전액 사측 출연	이주노동자 장애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기금 전달	6억5십만원(2016년)
경남 지부	사회연대 사업	2015년	전액 조합원	취약계층지원 교육복지원 비정규이주노동자지원 농민연대사업 문화연대사업	2억2천500만원(2016년) 3억500만원(2017년)
대구 지부	지역복지 기금	2010년	조합원 1인당 1천원 노사비를 11비율에서 2014년부터 12로 기금 조성	사랑의 쌀 사랑의 가전제품 등 기부	3천6백55만원(2016년)
포항 지부	지역사회 공헌기금	2010년	조합원 1000원+임금의 1000원미만 우수리+동일금액 사용자 출연(2013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어울림마당	1천736만920원(2016년)

사회연대(사회공헌) 활동의 흐름
- 현대중공업노조 -

14

	분류	제목	내용과 규모
1	지원사업	저소득계층 중고생지원	동구청 사회복지과 추천을 받아서 울산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하여 ...동구지역 중,고등학교 10명에게 연 1천 2백 만원 규모로 지원
2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단체 지원	동구지역 3개 단체에 각 2백만 원씩 6백만원 지원
3		울산 이주민센터 지원	울산 이주민센터 행사지원 2백만원
4	상담사업	무료 법률상담	노동문화정책연구소에서 주 1회 지역주민과 조합원,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진행함
5	문화공간	노조문화공간 주민개방	전하 후생관에 만들어진 문화공간 어울림터를 낮 시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매주 화요일~금요일 사용)
6	물품할인	전하후생관 운영	전하 후생관을 통해 생필품을 값싸게 판매(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지역내 가격조사 비교하여 할인 유도)
7	선전사업	지역소식지 발행	노동조합 예산으로 지역소식지인 '울기등대'를 만들어 월1회 무료 배포함 (지역 소식과 노동조합 동향에 대한 내용)

사회연대(사회공헌) 활동의 흐름 - 현대자동차노조 -

15

번호	사업내용	예산	결과및평가
1	울산 북구 비정규직 센터 운영 지원	1500만원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양성 2. 비정규직 및 임금노동자 현황조사 3.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연기 4. 취약노동자 긴급지원사업
2	울산 다울 성인 장애인 학교 지원 사업	500만원	1. 앞서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2. 불평등과 차별에 당당히 맞서는 민주시민 육성 3. 소통과 공예 능력 향상을 위한 연극교육
3	노동 역사 관련 지원 사업	1000만원	1. 노동자생애사 구성사업 총5명 2. 노동이슈전 '푸른 작업복의 노래'
4	이주민 노동자 지원 사업	1400만원	1. 이주민노동자 미니영화 및 공동체 캠프 2. 소외계층 이주민노동자 의료지원 사업
5	다문화 가정 및 자원봉사 취약계층 지원 사업	1200만원	1. 다문화 취약 위기가정 67가 300만원 지원 2.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300만원 행사지원 3. 취약계층 추수명절 나기소외계층 독거 어르신, 초소 가정, 한 부모가정 400만원 지원
6	지역사회 시민단체 조직사업	2000만원	1. 지역 공동체 사랑의 '배달방' 4호 지원 2. 사업주 대안영화 지역아동센터 방문 지원 3. 사회적대안 영화인드림 캠프 지원 4. 노동역사와 '연대'를 금속노조 사업 지원 5. 미혼모체인인 울류리복지재단에서 개최하는 울산 가족 공동체 만들가정다 행사 지원 6. 학교밖 청소년들의 자립 동기부여 사업비 지원
7	노거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복구중구)	980만원	복구 중구 지역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도움줄주기위해 실시함.
8	현대자동차 교육관 및 정(현)직자 지원센터단원 추진 타당성 조사사업	300만원	4차에 걸친 현장조사 및 연구 단원간담회등 타당성사업 진행
9	대형안경원 숲 보호 초입원 봉사 활동	3300만원	노사사회공헌기금출연및학교 초입원교육 시간에 봉사활동으로 실시총300명 3000여명 이슬기구기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
10	소외계층 침수리 및 지역 행사개편 사업	1억2천만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소외계층 도매장민생극대량생산 봉사 지원
11	학교 자동차 놀이터 프로젝트사업	1억	사회공헌사업 울산지역학교놀이터한정개편
12	'문화나눔' 행복한 초·중·고 지원	6000만원	문화소외계층 관련 및문화행사 지원(화)개편
13	장애인 직업장 및 사무실 개선	1300만원	동구 장애인 보호 직업안정센터개편
14	울산지역행사 및 축제지원	4200만원	복구쉬무리축제 용기축제등6곳 지원
15	노사자 협의회는 지역 가계방출 사업	3600만원	1.현대차 노사자 협의회는 어린이날 놀이차량은 아이들대 규모행사 지원 복구, 중구 아동500명초청 2. 복구, 중구 다문화가정어울리기 신청기 지원
16	지역상권 살리기 청년기획단지원	1000만원	청년일자리지역상권살리기 지원행사복구신천시장조금포탈할길씨스타일개회
17	키즈오브파크 건립 기금부	489억	유지227명,생일대교육장200명, 일회교육장500명 6월2일 개관식 정상운영
18	당사 현대차 비상호로 캠페인 100% 체결	30억	복구지역발전을 위한 당사행 3차 1회 비상호로 캠페인 조성 대규모 사회공헌사업
19	지역나눔 실천자선 경기대회지원	3000만원	지역나눔 실천자선 경기대회관련위기관리 긴급지원
20	복구 지역 건강 나눔 활동	3000만원	H지역동행 및 다문화센터연계복구 건강 나눔활동

사회연대(사회공헌) 활동의 흐름 - 금속노조 -

16

• 금속노조 기부들의 사회연대활동의 특징과 과제

첫째, 기금조성의 형태와 관계없이 대부분 지부는 현물기부와 재능기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기부형태의 활동은 사용자와의 이해관계와도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무난하게 실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둘째, 조합원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주체화 형성, 노조의 지역사회 회계모니 확장과는 거리가 있음.

물론, 전략적인 목표와 기획 속에서 나타나는 과정이라면 일정부분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기금운영에 대해 노조의 완전한 자율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셋째, 노조가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지역지부 간부 몇 사람의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음.

사업을 맡은 간부들은 전반적인 사업기획과 더불어 조합원 모집까지 해야 하는 등 노조활동과는 별도의 조직화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넷째, 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됨.

사례 1: 부산노동자생활협동조합

17

사업방향과 목표

- 대중적 생활지향: 기존 친환경 먹거리물품은 가격이 부담스러우므로 직거래 공동구매를 통해 공정한 가격 공급을 목표로 함
- 지역사회와 소통: 지역 생산자를 개발, 노동운동, 지역사회연대의 가고
- 생활공동체 지향: 시장경제가 아닌 노동자 민중의 자립경제 구현

정립일	2009. 9월	주요사업	
조직체계	총화이사회-사무국	생활사업	미장운영
재정규모	매출액: 2억8천2백만원	교육사업	진행사업임용
재정원천	조합원 출자금(9만원) 수익금	의료사업	진행사업임용
사무국인원	비상근 1명, 상근 2명	금융제운동	진행사업임용

	2009년	2010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조합원(명)	315	467	704	737	757	812	831
매출(원)	85,368,492	341,570,921	364,364,302	396,163,786	345,274,065	349,968,222	282,148,435
손익(원)	-37,785,498	-19,515,274	-12,373,644	160,354	-12,911,783	-6,708,513	-2,846,988
이용률(가구)	165(35%)	195(36%)	186(26%)	183(25%)	181(24%)	173(21%)	145(17%)

사례 1: 부산노동자생활협동조합

18

- 평가
 - 초기 조합원들의 사회적 역할을 활용하여 사회연대를 실천하고 가족들을 포함한 공동체운동을 지향하였으나 현재는 매장운영에 집중되고 있음
 - 현재는 자본잠식 상태. 일일주점, 고용축진금 등을 활용하여 유지 중
 - 물물구매는 지역 생활협동과 공동구매를 통해 조달. 노동회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일반 물품 판매중
- 활동저하 원인
 - 본부집행부의 교체로 사업연속성 저하
 - 조합원 다수가 남성들이어서 생활활동에 소극적
 - 생활 등 활동에 대한 교육부재
 - 영끌 특판 등 기존 구매 노조가 친환경물품보다는 일반 물품 선호로 구매력 저하
 - 물물다각화, 생산지 발굴, 공동구매 사업 등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움
- 향후 계획
 - 창고형, 온라인공급과 차별화되는 편의정형 매장으로 변화 모색

사례 2: 금속노조 경남지부

19

활동개시	2015년	주요사업
조직체계	사회연대위원회 교육비지원	취약계층, 비정규노동자 자녀 장학금
재정규모	364,380,375	비정규사업지원 비정규, 이주노동자 사업 지원
재정원천	조합비	취약계층지원 사업공모, 위탁사업 지원
사무국인원	담당자 1인	민중연대 김장김치계약과 시민단체기증 문화단체 사업사업 공모

● 2018년 공모사업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삼성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구술기록
- 창원도우누리: 창원시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
- 장교육학부모회: 청소년현대사기행
- 경남여성사회교육원: 취약계층여성직업훈련과 건강할말자리만들기
- 마창희망지역자활센터: 저소득 남성1인가구 밑반찬지원
- 경남여성회: 취약계층 여성가장 지원
- 진해장애인권센터: 월체어 전용모터 장차지원
- 경남민예총: 소외지역 문화예술교육 등

● 성과

- 조합원기금으로 운영하는 유일한 사회연대사업
- 시민, 사회, 복지, 부문단체, 진보정당과의 연대 모색

● 한계와 과제

- 새로운 사업기획의 부족 -> 전문인력 채용 필요
- 사업영역이 경남 전역이지만 현재는 창원을 중심으로 진행->사업공간 확대 필요
- 문화연대, 청년학생사업은 지부와 공동으로 기획해야 할 필요있음
- 농민연대 사업은 3년간 활안지역과 진행했으나 2019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변경 필요
- 현재 모든 사업을 잠정중단하고 사업 평가를 통해 향후 방향 모색 중

● 기타

- 사업의 목표와 전략이 무엇인가?
- 연대 대상과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조합원의 주체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공모사업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지원대상의 기준은 무엇인가?
- 사업의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사례 3: 공공상생연대기금

20

창립일	2017.12월	2019년 주요사업
조직 체계	이사회-집행위원회 사무국	아이디어공모 사업추진 단체에 1억원 이하 사업비 지원
재정 규모	5백 5억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과정 제공하고 우수자에게 기관 인턴십 지원
재정 원천	노조 사용자 기금출연	사회적기업소셜벤처의 창업을 희망하 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선 터들 기관들과 함께 양재동에 조성
사무국인원	상근 4명	상생연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 동을 기획하고 있는 청년 동아리팀들 대상으로 5백만원 지원

● 조직의 구성

15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 15인의 이사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속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대표자 각 1인, 공공기관 사용자측 대표자 3인, 지방공사·공단 사용자측 대표자 1인,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6인

● 사업의 기본 방향

- ① 사회적 격차 해소(희망사업): 장학사업
- ② 사회적 책임과 연대(꿈나누기사업): 청년직장체력
- ③ 기타 사회 공공성 강화(올타리사업): 연구사업

2019년 공모로 선정된 10여개의 사업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직장갑질신고 어플개발, 미디어노동자지원활동, 창원 중소공단노동자 작업복세탁, 미혼모 휴게시설 설치사업

● 성과와 한계

- 독립기구 구성, 재원조달의 안정성으로 지속가능성 담보
- 노조 독자사업의 어려움, 정부 성격에 따라 사업 변질 가능성 상존
- 조합원 참여, 주체화의 어려움

사례 4: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

21

창립일	2019.6월	2019년 주요사업	
조직체계	이사회-사무국	고아원 연계 보호 종료 아동 직업교육 지원사업	
재정규모	50억	금융취약계층 금융사다리 교육지원 사업	
재정원천	노사공동출연	아주노동자에게 여행과 교육 기회 제공 사업	
사무국인원	상근 1명		

조직의 구성

- 이사장 1인, 이사 5인~15인 이하, 감사 2인 이하.
- 당연직 이사는 사무금융노조 대표자 1인, 사무금융노조 소속 회사 대표이사 1인,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등 8인~13인 이하로 구성. 사무국은 현재 1명의 재출상근직이 있고 향후 추가로 모집할 예정. 사업의 지원업무는 노조 중앙의 정력실

주요 사업

-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 ②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 ③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성과와 한계

- 독립기구 구성으로 안정성 마련
- 산별협약이 아닌 개별기관의 성격에 따라 참여 여부 결정
- 노조 독자사업의 어려움, 정부 성격에 따라 사업 변질 가능성 상존
- 조합원 참여, 주체화의 어려움

사례 5: 강서양천민중의 집

22

창립일	2014. 3월	주요사업	
조직 체계	중화운영위-사무국	공간나눔	'사람과 공간' 사무실 운영
재정 규모	1억 1천만원	민중회관 건립	중화회관 건립 계획
재정 원천	회비, 후원주점 (개인, 300명 단계 14개)	노동관련	정기노동캠페인, 노동교육, 투쟁사업장 연대
사무국	상근 1명, 반상근 1명	지역공헌	김장나눔 등

설립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노동정치연대, 공공운수현장조직, 신길수추모사업회의 책임자들 50명이 창단발기인이 됨.
- 수입: 회비, 공간 사용료, 수탁사업, 후원주점

연대 대상

- 지역의 노조들(재정, 지역 공헌 사업에 동참)
- 지역취약계층(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시민법률학교)
- 지역 시민사회 단체(지역 이슈 중심의 연대)

성과와 한계

- 공간 활용: 지역 단위 네트워크 활성화, 각종 사업 진행의 거점 활용 민중의 집 건물 건립 예정
- 조직운영의 투명성: 정기적으로 활동내용과 재정상황을 회원들에게 발송
- 한계: 재정 규모의 한계.

사례 6: 희망연대노조의 (사)희망씨

23

창립일	2014. 2월	주요사업	
조직 체계	중화이사회사 무국	희망올타리	교육지원 청소년생리대지원 아동청소년건강지원 교육문화 지원 주거지원
재정 규모	3억 2천만원	네팔 희망채우기	아동학교보내기 나눔연대여행
재정 원천	회비(개인, 단체)	노동관련	노동인권사업단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지역사회 노동인식개선 청소년올타리지원
사무국	상근 4명	지역공헌	과일나눔집수리

- 설립**
 - 2013년 노조총회 의결로 2014년 2월 창립
 - 재정 단합에 따른 사회공헌기금과 회비
 - 상근자: 노조 경력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활동가
- 연대 대상**
 - 위기청소년, 미등록 이주민 자녀, 아동청소년 건강지원, 문화소외계층 아동
 - 네팔·벨벳지역에 학교급식비와 시설개선 지원
 -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관련 이슈대응 캠페인, 청소년과 조합원이 함께하는 올타리 활동
 - 지원대상 선정 시 조합원 추천제 활용
 - 우분투, 철도재단 등 유사 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 확장 중
- 시사점**
 - 창립 시 조합원의 광범위한 동의 필요
 - 사업 선정 시 지역 단체 및 활동가와 수시로 만나 소통과 기획
 - 노조와 독립적 기구 구성을 통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담보
 - 법인 또는 재단의 선택 시 참고

■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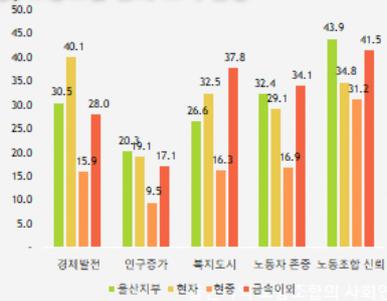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가 2019년 6-7월 조합원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958명 수거하여 응답률은 43.5%**
- 전체 조사 부문은 크게 네 가지 영역**
 - 첫째, 소득과 소비, 계층 인식
 - 둘째, 삶의 질 만족도와 복지 인식, 사회참여 현황, 울산의 미래에 대한 전망
 - 셋째, 노동조합 활동 진단과 인식, 사회연대 활동 전망
 - 넷째, 지역 연대조직 건설에 대한 의견 등
- 노동사회포럼에서는 이 중 일부 내용을 발표함.**

2020년 노조의 사회연대활동,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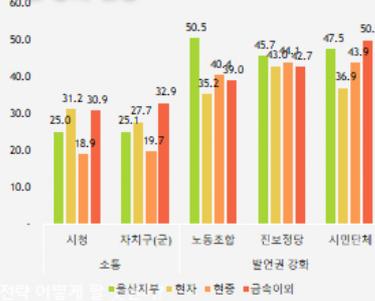
울산의 미래 : 경제-인구-복지 전망 낮고 노동조합 신뢰와 영향력 기대

25

• 경제발전, 인구증가, 복지도시, 노동자준중, 노동조합 신뢰 도시 전망



• 자치단체 소통과 노동-정당-시민단체 발언권 강화 전망



조합원들의 지역복지 서비스 만족도 낮아

26

• 울산시 복지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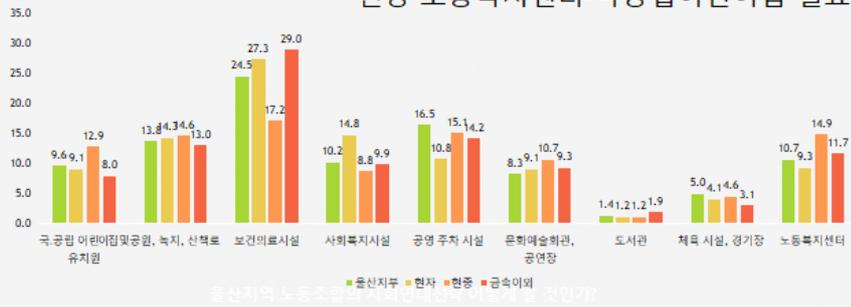
• 울산 자치구(군) 복지서비스 만족도



울산에 보건의료시설 요구가 가장 높아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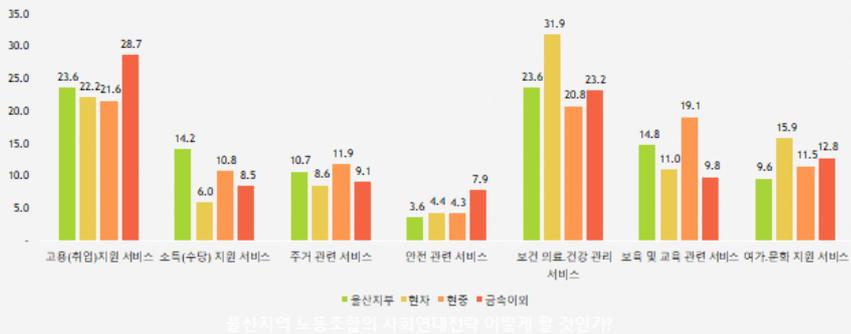
- 울산지부-현자는 공공병원 수요 높고,
- 현중 노동복지센터-국공립어린이집 필요



고용과 의료 복지가 최우선 요구

28

- 울산지부는 소득지원-보육 복지, 현자는 건강, 현중은 주거와 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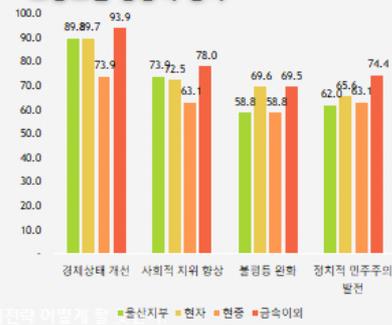
노동조합이 지역사회 책임-역할 수행, 우리 경제사회에 긍정적 영향력

29

• 소속 노동자의 지역사회 내 책임과 역할 수행 정도



• 노동조합 영향력 평가



조합원 기부활동 참여도 47.3-64.1%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14.6-31.0%

30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경제적 여유 부족	기부에 무관심	기부방법 모름	기부단체 불신	기부요청 없음
울산지부	43.3	16.7	3.3	31.7	5.0
현자	34.3	21.7	5.1	34.3	4.6
현중	57.0	19.4	0.6	20.0	3.0
금속이외	34.4	31.3	3.1	28.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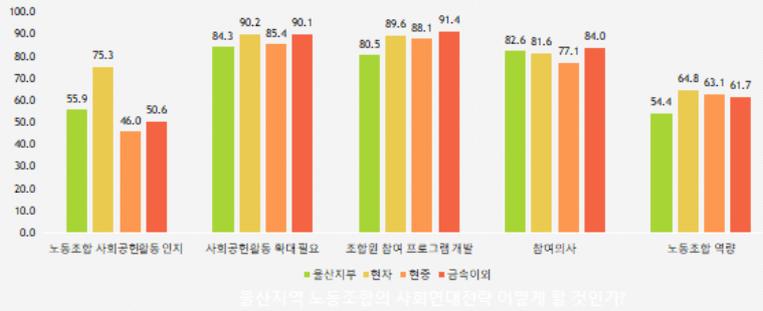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시간부족	정보 모름	하기 싫음	경제적 여유 부족	프로그램 불만
울산지부	39.2	14.6	12.3	25.7	8.2
현자	35.2	20.1	16.1	17.8	10.9
현중	27.6	19.1	15.1	34.6	3.7
금속이외	40.3	23.9	13.4	13.4	9.0

노동조합 사회연대활동 확대 필요 84.3-90.2%, 조합원 참여 의사 77.1-84.0%, 노조의 사회연대활동 역량 부족 인식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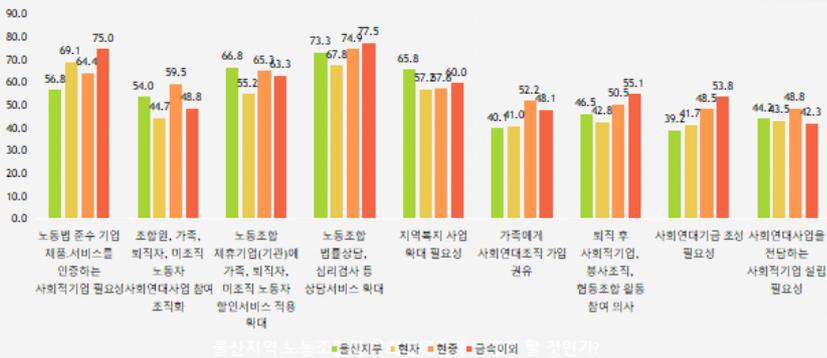
31

• 노동조합 사회연대 활동 인지도와 참여 의사



사회연대사업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 필요 42.3-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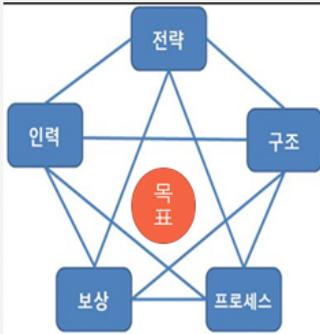
32



시사점과 고려사항

33

- **사업목표와 전략이 명확해야 함.**
-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목표	전략	구조
이미지 개선	기금 형성과 전달	노조 기금, 또는 법인 설립
조합원 활동력 대	봉사활동, 시민사회단체 연계	연대사업국 활성화
조합원 소비활동 조직화	소비협동조합 설립, 상협과 연계	노동자협동조합 설립, 사업국 설치
퇴직조합원 재취업	생산자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노조 주도의 재취업 센터 설립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영향력 확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상설협의체 건설, 연대기구 설치

시사점과 고려사항

34

- **재정조달 방식의 선택**

	노사공동	노조 독자	회원의 회비
안정성	높음	낮음	낮음
독자성	낮음	높음	중간
사업다양성	낮음	높음	높음

- **사업 프로세스(조합원 참여)에 대한 고려**
 - 조합원 공모사업 및 지역활동(시민사회단체, 정당 활동 등) 사업 지원
 - 각 의제(이슈)별 활동 또는 시민사회단체활동과 조합원 매칭
 - 사업내용 및 기금사용 결과에 대한 일상적, 정기적 보고체계 구축
 - 사회연대 활동 안내 및 소식지 발간
- **사업진행 인력 및 보상**
 - 노조 간부 VS 상근자 채용

정책 제언

35

✓ 목표

- '노동의 이데올로기, 문화, 활동력, 재정 등을 통해 영향력 확대' 라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울산 시민과 조합원들은 사회활동 참여에 관심이 많은 편임. 그러나 대부분 종교단체, 친목단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주를 이룸. 조합원들도 노조의 사지역회활동을 지지하지만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을 더 지지함.
 그 이유는 기업 이외에 사회공헌 활동 참여 통로가 없었다는 점이 원인. 따라서 동구, 북구 등 지역 참여 의식이 높고 참여 통로도 다양한 지역을 기점으로 노조의 보다 과감한 목표설정과 참여 필요.

✓ 전략

- 계급간 연대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의제에 개입 및 영향력 확대
 기존의 헌물, 재능 기부 중심의 활동 이외에 시민과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지역의 필요 사회서비스 문제에 역량을 투입하는 것에서부터 활동 집중하고 향후 의제 확대.

정책 제언

36

✓ 조직

- 노조와 독립적인 기구 설립이 효과적.
 민주노조 집행부 임기는 2~3년으로 연대 단위와의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 문제가 제기됨.
 연대활동 대상의 시간 성향에 맞춰야 함.
 사업 역량의 전문화 문제가 제기됨

✓ 프로세스 및 운영

- 기구 설립 초기부터 제 단체들과 방향 설정 및 운영방식 조정
- 노조 파견자와 전문 상근자의 조화를 통한 운영 필요
- 조합원들의 사업참여(활동 모집, 공모 등)에 대한 다양한 경로 설정

✓ 독자적인 활동 공간 마련

- 안정적 활동 거점으로 활용
- 공간 활용을 통한 교육, 제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정책 제언

37

(가) 울산 사회연대센터 설립(안)

법인구성	울산본부, 노조, 시민사회단체
조직구성	총화-이사회-사무국. 사업영역별 예시: 노동연대위원회, 복지연대위원회, 생활연대(사회적 경제)위원회, 지역연대위원회
재정	노조회원, 단체회원, 개인회원의 회비, 기타 수익사업
주요사업 예시	-지자체 관련: 지자체 사업 감시, 언론감시활동 지원, 풀뿌리 자치활동 지원, -지역 시민관련: 시민,청소년 노동교육, 법률 상담,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시민단체 관련: 지역 시민사회활동가 양성 및 지원, -협동조합 관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조합원 연계지원, 생산자협동조합구성지원, -공간 건립: 지역사회연대센터 공간 건립, 지역의료, 복지 공간 건립 추진 등

정책 제언

38

- 연구 과정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사회연대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
- 사회연대활동에 대한 개념과 대상의 문제
 - 노조의 연대활동이라고 하면 주로 투쟁사업장을 지원하는 '투쟁연대'와 계급 분석에 바탕을 둔 타 계급과 연대하는 '민중연대'
 - 노조활동의 범위는 대부분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고 그 외 영역은 정치적 영역으로 치환, 시민사회 참여자로서 노조 역할 사실상 부재
 - 연구자의 제안 : 노동이 중심이 되어 지역시민사회의 의제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 기부와 봉사활동의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하고, 지자체의 정책의제에도 개입하고, 생활이슈에도 개입

2020년 노조의 사회연대활동,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정책 제언

39

- 노조와 센터와의 관계 문제 : 사회연대사업은 노조의 일반적인 사업과 기본적인 성향
 - 사업 대상이 노조가 조합원들로 한정되는 반면, 사회연대사업은 조합원+지역 시민들과 단체
 - 사회연대사업은 일정 정도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고,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활동가가 필요
- 토론과정에서 센터의 독립이 연대사업의 외주화로 인식되는 문제
 - 센터를 노조 산하에 두어 통제한다는 인식을 한다면 기존의 연대사업국과 차별성 부재-연대의 내용과 폭 협소해질 가능성
 - 노조는 적극적 후원자로서, 센터의 사업 제안자로서, 한편으로는 감시자의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

2020년 노조의 사회연대활동,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발제2.

한국, 독일, 캐나다의 재단/기금 사례

이명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목차

- ❖ 한국, 독일, 캐나다의 재단(기금) 사례 소개
- ❖ 7개 사례 비교
- ❖ 사회연대전략이 필요한 이유
- ❖ 사회연대전략으로서 재단의 목표
- ❖ 재단 사업의 추가적 구상

(재) 공공상생연대

- 설립년도: 2017년
- 참여조직: 5개노조(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 설립배경: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와 함께 기지급된 인센티브를 사회적 연대차원에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자고 노조가 제안
- 미션: 상생과 연대로 건강한 노동존중사회실현
- 비전: 사회적 격차 완화(취약계층), 사회적 연대(비정규직/저소득노동자), 정의로운 사회실현(약자의 권익 대변), 사회공공성 강화(공공기관)
- 재정규모: 505억원(2019년 현재 42개 공공기관 기부).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 환수 및 반환 금액,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과 기부금 등이 주요 자원

- 이사회: 15명의 이사는 5개 노조 대표자+사용자 대표 4인+노동계,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 감사 2인은 공대위 추천 1인과 고용노동부 추천 1인으로 구성.
- 사업영역
 - ① 희망사업(기본사업): 장학사업, 휴양시설제공, 학습방
 - ② 꿈나누기(사회적책임과 연대): 직장체험 연수프로그램, 연구사업(일자리정책, 비정규직 정책 등)
 - ③ 울타리사업(사회공공성강화): 공공포럼, 노동법교육(비정규직 등), 인문학강좌, 무료 노무/법률 상담
 - ④ 특별사업: 사회공헌활동 응모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 2018년 사업
 - 철도역사어린이집(1개) 완공, 청년공익활동가 대출사업, 장학금(89명), 소설벤처허브센터(창업청년지원) 건립
- 2019년 사업
 - 직장갑질신고 어플개발, 미디어노동자지원활동, 창원 중소기업노동자 작업복세탁, 미혼모 휴게시설 설치사업
 - 대학동아리, 제주희망일자리 사업(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과정 및 인턴십)

금융산업공익재단

- 설립년도: 2018년
- 참여조직: 금융산업 33개 기관 노사
- 설립배경: 2012, 2015, 2017년 금융노조와 사측의 합의로 임금인상분 중 일부를 사회공헌 기금으로 조성하였음(1000억원). 2017년 산별교섭에서 금융 노사가 공익재단 설립에 합의, 2018년에도 1000억 출연키로 합의
- 목적: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재정규모: 2000억원
 - 노동조합은 임금인상분의 일부, 사용자도 동일 금액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재원 마련
 - 이사회: 노동조합 추천 5인+사용자 추천 5인 (당연직 이사포함)



2019년 사업

- 아이디어공모사업(10억), 위탁공모사업(344억), 직접사업(6억)
- 위탁공모사업 중 거점별 어린이집 설치 사업(300억원)
- 직접사업: 소방청 업무협약: 방화복 전용 특수세탁기 제공

(사) 희망씨

- 설립년도: 2013년
- 참여조직: 희망연대노동조합 및 지역주민(회원 600명 6:4)
- 설립배경: 2011년 씨앤엠지부 임단협으로 얻어낸 사회공헌기금으로 추진하던 '나눔사업(지역연대)'을 노사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 연대사업을 위해 독자적 법인 설립 추진
- 목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자 중심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려는 목적,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목적
- 재정: 2018년 기준 수입 약 3억원(회비+후원비 중심)

(1) 활동원칙

- 시혜가 아닌 나눔,
- 봉사가 아닌 연대,
- 기부가 아닌 참여,
- 장기적 성장 지원

(2) 사업영역

- 희망올타리사업(국내위기아동지원): 교복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심리정서지원, 교육문화지원, 건강지원, 주거지원, 긴급지원
- 해외위기아동지원: 네팔 아동지원사업
- 노동인권사업: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활동가양성 등
- 소통사업: 가족캠프, 아버지학교 등

한스뵘클러재단

- 설립년도: 1977년
- 참여조직: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 설립배경: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경제민주화 요구에서 시작된 공동결정제도가 확대되고 법이 확립되자, 노동자평의회와 감독회의 노동이사를 지원하고 교육하는 역할이 필요해 짐
- 목적: 연구, 교육 및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사상을 지원하고 현실화 시킴(강령 2조)
- 재정: 2015/16년 7,390유로(약 970억) (기부금+정부지원(장학사업))
- 감독회의 노동이사는 이사로서 받는 보수 전액 기부(전체 재정의 65%)



- 감독회: 41명. 재단을 감독하고, 이사의 임명과 소환 권한. 독일노총에서 임명한 조합원으로 구성(노동자평의회 위원, 노동이사, 재단 소속 책임강사, 재단 장학금 수혜자 등)
- 이사회: 12명. 이사회는 감독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고, 재단 전반 책임(독일노총, 탄광 화학에너지노조, 통합서비스노조, 금속노조, 노동이사 등)
- 주요 사업
 - ① 장학사업: 인재양성사업(노동자와 노동자 자녀)
 - ② 대학교, 고등교육기관에서 정치 교육 활동
 - ③ 연구지원사업: 매년 100여개 프로젝트 (산업구조변화, 공동결정제도, 임금노동, 복지국가정책, 노동교육, 노동조합역사)
 - ④ 공동결정제도 지원(세미나, 교육-법률/회계, 상담 등)
 - ⑤ 연구소 운영(경제와사회연구소 등)

한스뵘클러 재단의 사회연대기금

- 1973년 기금 조성
- 1973년 칠레의 아옌데 정부에 대한 군사쿠데타 이후 민주적 칠레정부 수립을 위해 연대기금을 설립. 1992년 칠레 군사독재 종결 이후 연대기금은 국내외 프로젝트로 방향 선회
- 기금은 재단의 <장학금 수혜자>와 <강사>들의 기부금으로 조성(장학금의 1%, 강사의 강의비 전액/일부)하고, 재단도 동일 금액을 기부하는 식으로 2배로 만들.
- 재단 강령에 따라 기금은 <학술지원, 연구, 교육 및 공동결정과 관련된 연대 프로젝트 지원>
- 연대프로젝트는 비영리단체의 신청을 재단에서 심사하여 승인하고, 지원금은 1,000~10,000 유로가 일반적임.

오토 브레너 재단

- 설립년도: 1972년
- 참여조직: 금속노조(IG Metall)
- 설립배경: 금속노조의 산하 연구재단. 동/서독 정치적 경제적 통합과 사회진보적이고 민주적 유럽을 위한 구상.
- 목적: 공공의 이익 실현, 민주적 기본권, 사회통합, 지식과 실천의 교류
- 주요 주제: 노동조합의 문제점, 국제적인 상호이해, 사회 정의, 환경보호를 포함한 노동 및 생활조건 개선, 동서독 생활조건 동화, 노동법과 사회법
- 실천영역: 일, 고용 및 교육. 산업정책, 산별정책. 기업의 책임.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 관리
- 이사회: 금속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그외 이사(5명).

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e)

- 설립년도: 1983년
- 참여조직: 캐나다 퀘벡의 제1노총 FTQ(Fédération des travailleurs et travailleuses du Québec)이 설립
- 설립배경: 1981년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13% 이상에 달하자 FTQ는 노동자기금을 통한 노동자 스스로 일자리 창출을 시도. 1983년 예금기관 설립하고, 퀘벡 내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 주 정부는 저축 상품에 대해 큰 비과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법을 제정함.
- 이 기금은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벤처자본임. 개발자본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환경보호 등의 사회적 투자기준을 정하고 대출을 하고 있음.

- 100만 달러를 목표로 시작한 연대기금은 2019년 현재 보유한 총자산이 156억 달러(13.7조)
- 약 69만명(절반이 노조원)이 투자
- 총 3,126개 기업에 약 99억 달러 투자,
- 21만 5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유지/보존
- 2019년 투자수익률은 7.8%



목표

미션

- ① 일자리의 창출, 유지, 보호(퀘벡에 60% 투자 의무)
- ② 투자 기업 노동자에게 경제 교육 제공
- ③ 퀘벡 경제 활성화(노사 공동 혜택)
- ④ 노동자 은퇴 준비(세금감면 혜택)

*비과세은퇴저축상품(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

이사회

- 19명으로 구성(1명 공석). 11명은 주주 총회에서 선출(4명은 입후보, 7명은 추천)
- 나머지 7명은 FTQ 노동조합(대대)에서 내정된 이사로 임명
- 2014년 이후, 이사는 17->19명으로 늘고, 노동조합 이사는 10->7명으로 줄고, 독립적 이사가 4->7명으로 증가. 이사회 이사장도 독립적 이사가 맡게 됨



• 주요 활동

- ① 연대기금은 상티에의 금융 파트너가 되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첫 장기투자자본기금(15년후 상환)인 피두시상티에신탁의 신탁관리자가 됨(2006년, 연대기금 3천만달러, 캐나다 정부 2천만달러, 퀘벡주 1천만달러). 운영자금과 부동산자금 대출.
- ② 연대기금과 지방자치연합은 퀘벡 전역에 <고용개발을 위한 지역투자회사(SOLIDE)> 설립(1991). 현재는 지역연대기금(FLS)으로 불리고 있으며 80개의 펀드 운용. 기업을 대상으로 1억4천만달러투자. 42,603개 일자리 창출/유지

행동기금(FondAction)

- 설립년도: 1996년
- 참여조직: 퀘벡주 제2 노총인 CSN(*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nationaux*)이 설립
- FTQ의 연대기금과 유사: CSN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 세제혜택 제공, 퀘벡 내 기업에 60%를 투자.
- CSN은 FondsAction 이전에도 1971년 신용조합을 만들었고, 1987년 MCE Council을 세워 노동자 자주회사 설립 지원, 재무보고서 분석 등 노동조합에게 경영 관련 서비스 제공. 1987년에는 은퇴저축예금(Batirent)을 도입하여 노조가 기금 운용한 경험이 있음.
- 자산은 21.8억달러, 17만명의 투자자, 1200여개 기관에 10억불 이상을 투자중임.
- 이사회는 15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5명이 노동조합 이사임

FTQ 연대기금과 차이점 – 투자 대상 기업

Fonds de Solidarite

투자가능한 기업(Admissible Business)

1. “퀘벡에 거주하는 직원의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업”
2. 자산이 \$ 100,000,000 미만 이거나 순자산이 \$ 50,000,000” 미만인 기업
3. 2005년부터 1억 미만 대기 업도 투자가능

Fondaction

1.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회사 및 협동조합 등 주주와 조합원에게 공평하게 투표권을 배분하는 기관
2. 직무 통제, 조직화 등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기업
3. 환경보호 및 개선을 실천하는 친환경 기업

사회적 경제 지향이 강함

주요 활동

- 2000년 Filaction 창설. Filaction은 퀘벡 내 문화, 환경, 사회적 경제 분야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비영리단체. 227개 중소기업 직접투자
- 피두시상티에 투자신탁에 8백만불을 투자하였음.

	공공상생연대	금융산업공익재단	(사)희망씨	한스비클러재단	오프브레너재단	연대기금	행동기금
제안 조직	노동조합(5)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자원조달 방식	기부금 (성과연동제한 수액 이외 방식 불투명)	노조 임금인상분 일부 사측 동일금액 (추가가능성?)	회비, 후원금	기부금 (노동이사 임금 전액 기부)	등록 금속노조 청산금	개인 저축	개인 저축
핵심사업	주변부 노동시장 계층의 자활과 권익대변	사회공헌활동	지역연대 생활문화운동 (공동체주의?)	경영참여 경제 민주화	일, 고용, 교육	일자리창출 사회적 책임 금융	일자리창출 사회적 책임 금융
이사회 참여 주체	노, 사, 공	노, 사, 공	?	조합원	조합원?	노조대표 독립전문이사	노조대표 독립전문이사
조합원 참여 방식(Link)	명시된 것 없음	명시된 것 없음	회원으로 참여 사업 참여	교육, 상담	명시된 것 없음	저축	저축

사회연대전략이 필요한 이유

<연대> 개념의 이중성

- 배제적이면서 포용적 (예: 기업별 노동조합 VS 산별노동조합)
- 기계적연대 VS 유기적연대: 기계적-강한 집합의식과 동질성, 유기적연대-약한 집합의식과 상호의존성=> 어떻게 집합의식을 강화시킬 것인가의 문제
- 한국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배제적-기계적 연대(조직연대)에 기반, 강력한 집합의식(but, 협소한 '우리'의식)과 응집력으로 단체교섭을 통한 이익 극대화에 몰두
- 제도적 쇠변리=> 노동조합법 상 노조의 목적(근로조건향상의 향상)에 갇힘.
- 한국 노동조합의 배제적-기계적 연대는 결국 '우리'의식을 '나의 조합'안에 가두어 버림. => 노동자 전체 이익 VS 노조 이익
- 노동조합 사이의 연대도 <비용>으로 간주. 비용이 커질수록 나의 이익이 줄어들어 연대 참여가 약화



노동시장 불평등에 저항이 힘들고, 시민사회와의 연결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전략. 사회적 고립과 기독교 세력(이기적 정규직 노조)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몰린 상황

사회연대전략으로서 재단(기금)의 목표

(1) 다양한 주체와의 연결 혹은 형성

- 노동조합 이외의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과의 연결, 혹은 이해대변 조직을 갖추지 못한 주체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

(2) 조직 노동의 자원 재분배

- 미조직/사회 세력과의 연대는 조직노동이 보유한 <자원>의 재분배로 가능해 지는데, <자원의 재분배>를 "비용"으로
-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원 일부의 연대 대상에게로의 이전은 불가피.
- 이익의 극대화에서 이익의 최적화(?)로의 전환

사회연대전략으로서 재단(기금)의 목표

(3) 조직노동의 참여

- 재단=노동조합 대리주의 극복 (예: 희망씨 조합원 참여).
- 이사회 참여와 더불어 조합원 참여를 촉진할 사업 발굴의 문제

(4) 이익의 포괄성(공공의 이익)

- 미조직, 비정규, 환경, 교육, 부동산 등
- 이익의 범위와 참여의 범위를 어떻게 조화시킬까

재단 사업의 추가적 구상

(1) 장학 사업의 범위

- 노동을 연구하는 석박사 과정의 연구자에 대한 장학사업 => 친노동연구자 양성 => 장기적으로 재단 내 연구조직의 씨앗(?)
- 조합 내 다시 공부하는 조합원을 위한 장학사업

(예: 한스비블러재단의 장학사업 => 장학금 수혜자가 다시 사회연대기금으로 참여강화)

(2)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

- 부동산 문제는 조합원도 예외가 아님. “내집마련” => 청년층은 포기 상태
- 사회주택 사업을 하는 사회적경제 단체, 협동조합과의 연대
- 은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짓고, 그 중 일부를 청년 조합원에게 임대

(3) 사회단체, 노동이해단체에 대한 인큐베이터

-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처럼 사회운동을 시작하는 단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예: 우분투의 라이더 유니온 이윤자수리비 지원=> 공제사업으로 확대중=> 조직화)

(4) 3개 재단간의 연대 사업

- 공통의 주제, 관심사에 대한 재정과 참여를 키워 내기

토론1.

노동운동이 사회연대전략으로 나아 갈 방향

하부영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손자병법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 “적군은 적게 아군은 많게”
- 정도전의 2대 혁명론 → 대의명분과 혁명세력의 도덕성
- 노동조합의 사회적 고립화 극복방안 → 사회연대전략 → 세상을 바꾸는 운동

●노동조합 이전의 노동운동은 공동체 운동

- 17세기 후반 영국 장인들의 우애조합(상호부조와 친목도모)
- 이후 공제조합 운동 → 산업혁명과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조합운동 → 협동조합 운동
- 지역별 노동조합 → 산업별 노동조합운동

●한국에서 노동조합

-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 →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 → 1927년 조선노동총동맹(노농 분리.독립)
- 지역별, 직업별 노동조합 조직 → 1927년 영흥노동자 최초 지역총파업 → 1929년 원산노련 지역 총파업
- 2006년 다시 산별노조운동으로 → 산별노조 법제화 요구(?)
- 2000년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저지 국민기업화, 공기업화 요구 자동차산업 총파업 → 공기업화 이후의 경영참여와 노동자가 주인으로 경영하는 노사관계 연구 안됨.

●한국에서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정체와 퇴행

- 87년 노동자 대투쟁 → 10년의 전진과 20년의 후퇴
 - 87년 노동조합 설립, 빈곤과 노예 같은 삶에서 탈출 → 97년이후 정규직 정리 해고제 상시적 고용불안/비정규직 반값 임금 고용불안 → 차별과 경쟁 강화 → 정권과 자본의 분할지배관리 정책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제적조합주의 → 공장 담벼락 안에서 실리경쟁
- 2004년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과 위기 논쟁¹⁾ → 노동자가 양극화 심화
- 자주성의 상실 → 정권과 자본에 의존하는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한계
 - ① 정치투쟁, 반대투쟁, 저지투쟁 → 정권이 안들어 주니 안된다는 패배주의
 - ② 현장에서는 자본의 품 안에서 요구와 투쟁(대공장 노동운동은 협조적 실리주의와 전투적 실리주의 → 민주당의 정체성 실종) → 임금과 복지 확대 내부 조합원 지향성이 강화되는 노동조합 경쟁의 속성
 - ③ 정권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당장 노동조합의 결정만으로도 노동조합의 성과와 효력을 나눌 수 있는 부분까지 실행하지 않는다.(돈이 없어도 할 사업은 많다)

1)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연대성 위기(2004년 중앙대학교 이병훈교수 논문 참조)

●지난 30년 대공장 노동운동은 ‘부자 되기 운동’

- 현대차지부 평균 연봉 9천만원(평균근속 23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임금이 부족해서 살기 어렵다고 한다.
- 7천여명이 신용불량자 상태이고 1년에 5명이 돈 문제로 자살한다. 90%가 임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 자본주의에서 돈 많이(임금 높여서) 노동자들을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만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 → 부자 되기 운동은 결국 ‘자본에 부역하는 운동’으로 귀결
- 노동조합의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는 사기

[현대차지부 8대 임원선거 각 선대본 방문 인사말 일부 - 하부영]

나는 내가 생각했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꿈을 10분의 1도 펼쳐보지 못하고 좌절과 포기를 해야 했다. 각 후보들이 민주노조를 하겠다고 나서는데 과연 지금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다시한번 생각해선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반영되기 바란다.

현대차지부 역사가 32년이다. 열심히 앞만 보고 투쟁하여 연봉 9천만원에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쟁취하여 노동조합이 올라갈 수 있는 최정점에 올라섰다. 세금으로 보면 대한민국 3%이내, 임금으로 보면 10% 안에 들어간다. 계속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임금인상 투쟁방향이 옳은 것이냐 생각해 달라.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우리는 10% 이내의 기득권자 세력이 되었다.

한 사회를 분석하는데 10대 90의 사회로 분석한다. 우리의 투쟁이 10%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방향이 맞느냐. 90%의 소외받고, 배제 당하며 사회불평등, 빈부격차, 임금격차에 분노하며 치를 떠는 세력이 존재한다.

민주노조운동이 세상을 바꾸자고 한다. 평등세상, 노동해방 사상이 민주노조운동이다. 그런데 현대차지부 노동자들은 10%의 기득권자 세력에 편입되어 있다. 기득권을 버리고 90%와 연대하여 평등세상, 노동해방세상으로 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 이게 지속 가능한 방향이고 옳은 노동운동인가?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민중봉기와 혁명이 일어난다. 민생문제이다. 사회불평등, 빈부격차를 타도하기 위한 90% 민중들의 봉기이며 혁명이다.

만약 한국사회에 5~10년이 지나며 사회불평등, 빈부격차,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봉기와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촛불혁명의 기운이 그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90%의 소외받고 배제 당하던 민중들이 평등세상,

노동해방 세상을 요구하며 연봉 5천만원으로 평등임금 실현하자는 봉기와 혁명이 일어나면 현대차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말하던 세력들은 혁명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기득권 지키기 반혁명 편에 설 것인가? 민주노조를 말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운동해야 한다.

저는 지금 당장 90%와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보 하자는데 아니라 90%에 속하는 중소기업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사회불평등, 빈부격차,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투쟁에 나서는데 민주노조운동 세력이 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운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사람의 의식이 바뀌다는 건 30년이 지나도 어려움 → 조합원은 준비되어 있다. 활동가들부터 재교육이 필요하다.
-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약육강식의 냉혹한 자본주의 의식
- 사회연대는 진보운동, 노동운동의 기본인 “함께 살기 운동”
- 지도자는 등불 → 암흑천지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몇 가지 노동조합 사회연대전략의 실험과 경험

- ① 2008년 생활 속의 연대 → 민주노총 조합원 조직끼리 알고 응원하기
- ② 2008년 준조합원제 도입 추진 → 조합원/가족/퇴직자/미조직노동자/시민사회단체 등 20만 준조합원의 사회연대체 조직화 → 관심 부족과 노동조합이 할 일이 아니라 하는 생각으로 사회연대사업의 중요성에서 배제 당함
- ③ 2007년 민주노총울산 지역연대전략 설문조사 및 ‘지역연대사업위원회’ 구성 → 노동조합 실력과 관심 부족
- ④ 2018년 금속노조(현대차와 기아차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

●소결

-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은 정권과 자본에 의존성을 탈피하고 자주성 회복운동 → 돈 들이지 않고 미조직노동자와 즉각 효력과 성과를 나눌 수 있는 부분부터 결의
- 현재의 대공장 노동조합운동 방향성 상실 → ‘부자되기 운동’ → 자본에 부역하기
- 노동운동은 사회불평등과 빈부격차, 노동자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90%를 향한 구체적인 하방연대 실천 행동으로 사회적 고립 극복
-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산별노조와 지역별 실천과제 역할분담(예 : 5대 방향 30대 사업)

토론2.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사업과 노동운동

김형균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실장

1.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사업의 한계

1) 정제된 노조활동을 타계하기위한 수단

- 1997년 IMF 와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노동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노동자간 차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으며 이는 정규직 조직 노동자의 집단협 투쟁에 큰 영향을 주면서 노조활동의 질적인 발전이 정제되기 시작했고 이기적 조합주의라는 공세가 이어졌다.
- 노동조합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정치세력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기업별노조 중심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자본의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사회적 공세에 수세적인 대응투쟁을 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방법으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연대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올바르게 정착된 사례는 없다.
-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사업은 기업별 노조활동에 익숙한 조합원들의 비 주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노조 활동가들은 외부로부터 공세에 대응하는 수단 정도로 판단하고, 여전히 기업별 담장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의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 한계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구성과정에서 소속 노동자의 권익을 기업주에게 요구하여 쟁취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 노동조합 지도부는 투쟁을 전개할 때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힘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사측의 끊임없는 공세에 발목이 잡혀있어 일상적인 사회연대 사업은 여력이 없다.
- 특히 구조조정 상황이 발생하거나 노동조합 지도부가 어용노조로 바뀌면 사회연대사업은 중단되거나 약화될 수 밖에 없다.
- 노동조합의 활동이 자본과 대립전선이 형성된 투쟁에는 익숙한 반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결과치도 명확하지 않고 긴장감도 크지 않은 일상적 사회연대 사업은 어려워하며 계급운동에 충실하지 못한 개량적 활동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산별노조의 사회적 교섭을 위한 법적인 보장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점도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사업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2.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사업 활성화 방향

1) 노동계급의 확장 관점에서의 운동 전략

- 사업장 안에는 미조직 하청노동자가 있고 사업장 밖에는 대기업 협력사와 5인 미만 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가 존재함에도 현행 노동법 체계 안에서 조직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규합할 만한 조직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 곧바로 산별조직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면 조직의 구심축을 형성한 뒤 힘을 모아서 실질적 산별조직체계를 완성시켜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 노동자 스스로 상호 부조체계도 있을 수 있고, 지역에 파편화 되어있거나 소수의 전유물로 전략한 공공서비스 거점과 지원프로그램의 연결, 지역단위 노조와 사회단체를 연결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2) 노동자의 시민적 지위향상의 관점에서 운동전략

-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노동조합으로 뭉쳐있지만 노동자 개별로 사회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이 약하고 사회적 소통체계가 취약하여 실질적인 시민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다수의 노동자들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가 될 때 사회적인 지위 향상은 물론 정치적인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그 지위는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3) 보편적 복지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전략

-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는 원.하청간의 차별, 미조직노동자간 차별이 발생하면서 전통적인 임단협 투쟁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수준이 높은 정규직노동자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워 이윤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 재벌에 예속된 기업구조 속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하면 기업복지 향상이 쉽지 않고,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전통적 사회복지 활동으로 주거, 교육, 의료, 실업, 연금 등 사회적인 보편적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3. 지역 사회연대전략 구상(사례 : '동구지역 생활공동체')

1) 지역 조건과 필요성

- 울산 동구 지역인구는 19년 6월 기준 164,800명, 이중 고용보험가입자 46,900명, 조선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는 29,9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전체 노동자는 36,600명(울산 외 지역 거주자 포함)이 있는데 동구지역 전체 노동자중 64%가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다.(동구청 2019년 지역경제동향 자료)
- 현대중공업지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하청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노조가입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과거 블랙리스트 공포, 단결된 힘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경험이 없고, 평균 근속이 3.5년 정도로 매우 짧고,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하청업체가 원청에 의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불안이 노조가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그동안 노조가입운동 과정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오픈채팅방 가입 600여명, 하청노동자 요구 총투표 2,000명 참여 등의 사례를 보면 당장 큰 부담이 안 되는 자연스러운 형식은 쉽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연결망과 일상생활 속에서 끈끈한 연대경험이 필요하다.
- 노동조합이 지역산별운동으로 발전하는 단계적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정체된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

2) 추진과정

- 노동조합이 일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재법률상담, 노동생활안전, 지역대중강연회, 지역신문사업, 문화공간 운영 등을 지역으로 확장해서 진행하면서 지역단체와 연결한다.
- 지역 생활공동체 추진위를 지역의 노조단위, 교육네트워크, 소비자협동조합, 지역의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조합 연구소, 각종 센터 등으로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공동체신문 발행 사업을 하면서 지역생활공동체를 현실화시킨다.
- 지역생활공동체 회원(현대중공업, 미포조선의 원,하청 노동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만들어 공동체 회원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 가칭)울산 사회연대 센터 설립 추진과정과 결합하면서 점차 독립적 운영체제로 나가면서 노동조합의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진행한다.

토론3.

사회대개혁과 사회연대 활성화를 위해 노동조합이 나서야

김현정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1. 단단한 구태의 껍질에 갇힌 노동운동

한국의 노동운동은 기업 내부의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내부적 목표에만 치우쳐 왔다. 매년 10월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발표한다. 이 자료를 토대로 회사의 실적 개선치, 노동소득 분배개선치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임금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하고 교섭해 왔다. 새롭게 만들어진 노동조합들은 전임자(타임오프), 사무실 등 조합 활동 인정이 주요 교섭 목표이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들은 임금 인상이 어려우면 피복비, 교통비, 복지카드 등 급여성 단체협약 사항들에 교섭을 집중한다.

개별 기업별 교섭은 요구안을 만들 때부터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한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항이 요구안에 담기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 요구들은 반영될 길이 막히게 된다. 즉, 조직 내부의 의사 소통은 활발하지만, 사회와의 의사 소통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다. 87년 민주화투쟁 이후 노동조합은 이러한 기업별 교섭의 한계로 점차 사회연대를 외면해왔고, 이러한 결과 거꾸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2.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노동운동

개별 기업의 실적과 기업별 교섭의 성과(단물)에 취한 노동운동은 옆과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산별노조 역시 무늬만 산별이었지 연맹형 산별체제로 인해 산별중앙교섭을 진척시키지 못했다. 산별중앙교섭이 진행되지 않다보니, 산별중앙교섭의 지역적 효력확장, 업종별 효력확장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금융산업에 만연한 콜센터 노동자, 비정규노동에 대해 산별노조는 선언적 문구만 요구안으로 표방할 뿐 어떠한 실천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사회연대를 외면한 한국의 노동운동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처지가 되었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전 제시 실패와 사회연대(계급동맹)의 부재가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의 노동운동은 구국을 위해 피흘리며 싸운 레지스탕스 운동으로 기억된다. 독일의 노동운동은 무상교육을 쟁취한 성과로 국민들에게 기억된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운동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사회대개혁을 쟁취했는가? 국민과 소통하는 사회연대를 만들어왔는가?

3.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은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에 달려 있다. 2011년 미국의 부호 워렌 버핏은 이른바 ‘버핏세’를 주장했다. 자기가 돈은 많이 버는데, 그에 따른 세금이 작다며 부자들에게 소득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여파는 한국에도 불어닥쳤다. 당시 신한국당이 나서서 소득세율의 상위구간을 늘렸고,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전혀 다른 ‘건강한 보수’의 일면목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정책을 실행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증세와 감세의 태도가 바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구분선이다. 돈 만원의 가치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듯이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단이 필요하다. 조세정책을 통해 재원이 마련되었다면, 이제 보편복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무금융노조의 반성과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출범

2018년 사무금융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연대의 대장정에 나서자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곧바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원포인트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이었고, 만약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정규직들의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2018년 4월 18일 사무금융노조는 ‘사회연대 선포식’을 통해 우리의 비전을 제시했다. 개별 기업별 교섭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산별중앙교섭을 준비했다. 그리고, 6월 5일 사무금융노조 최초의 산별중앙교섭이 열렸다. 30여곳의 노사 대표자들이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 모였고, 우리는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대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KB증권, 비씨카드, 신한생명, 한국증권금융 등 12곳의 회사에서 사회연대기금 조인식을 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3년간 총 80억의 약정금액이 모였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노사가 함께 재단을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진척되었다. 그리고 11월 28일 사무금융우분투재단 발기인대회 및 사회연대 사례발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에 앞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었던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

익재단, 희망씨의 사례를 통해 노동운동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것이구나를 절감했다. 그리고, 각 재단 이사장들의 모임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모임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립된 노동운동을 넘어 사회연대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노동운동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5.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2019년 사업경과

첫째,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하 ‘재단’)은 연내 제2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제2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2020년 재단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둘째, 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우분투 장학사업'을 진행했다. 사무금융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간접고용 피고용자와 자녀(전문대 이상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사업을 전개했다.

셋째, 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출 금리 우대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우분투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신청한 기업을 상대로 인증 심사를 진행 중이다. 재단 및 관련 여수신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중소·벤처기업은 관련 자격 인증서를 취득하고, 이 인증을 통해 관련 금융 혜택을 받는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넷째, 재단은 국제연대를 추진하였다. 베트남 푸옌(Phu Yen) 지역의 주택 설립을 지원해 국제연대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푸옌 지역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다수 양민이 희생된 지역이었다. 베트남 노동자 단체와 협력해 해당 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공간 개선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다섯째, 배달 노동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자차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음식 배달 플랫폼이 확산함에 따라 배달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오토바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 배달 노동자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다. 재단은 라이더유니온과 협약식을 진행하고, 사고 발생 시 자차 수리비 일부를 지원해 배달 노동자 노동환경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6. 노동운동의 새로운 노선, 사회연대전략을 통한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노동 시장 내 분리와 갈등이 심각하다. 이대로 노동운동이 지속하는 건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 상생의 정신, 나눔의 의지로 사회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사무금융노조가 재단을 만든 이유이다.

재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운동을 사회 전체에 확산하기 위해 출범했다. 사무금융노사가 주도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을 해나간다면, 그 결과가 노동계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마중물이 더 큰 물을 길어 올리듯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기업별 교섭에 고착되어 한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재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의 새로운 노선을 천명해야 한다. 사회연대전략을 통한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토론4.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현광훈 | 공공운수노조 연대사업실장

1. 시대적 과제와 사회연대

- 2017년 현재 한국은 20세 이상 성인 중 소득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절반을 넘었음.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최악에 도달한 상황이며 이런 소득 집중도는 미국·일본에 비해서도 높음.(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2019) 토지 소유는 상위 3%가 전체 개인토지의 56%를 차지하고 있음.(2017년 말 기준) 이러한 소득집중과 양극화 문제는 노동을 넘어 젠더, 청년, 교육,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 여러 분야의 차별과 혐오로 확장되었고 사회적 관계와 신뢰는 사라지고 한국은 균열과 고립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음.
 - “요즘 불평등 완화 대책이라고 쏟아내는 것들과 같은 방식의 주변적 개혁으로는 오늘날 시장소득과 부의 분배 추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경제 위기는 심각한 충격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폭력적 압력 없이는 혼자 힘으로 불평등을 줄이지 못한다.” (역사학자 발터 사이델, 『불평등의 역사』, 2017)
- 시대적 과제로서 노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사회연대의 목표는, 사회양극화를 초래한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관계와 사회역량을 만들고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을 보더라도 초절정의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은 큰 반발과 대립을 동반하게 됨. 사회연대는 반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의 동력을 충전하는 과정이며 구조개혁의 충격을 완화하는 사회적 범퍼 역할을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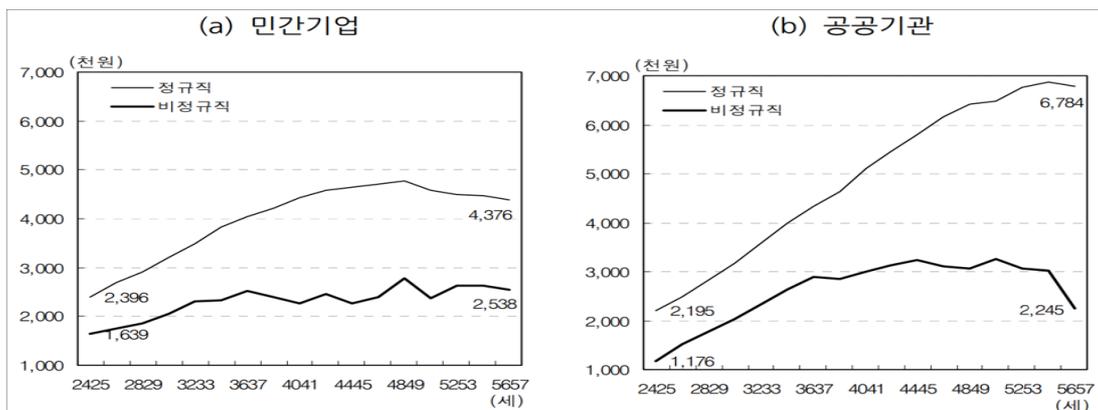
2. 사회공헌과 사회연대

- 사회공헌은 노동조합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타적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지역)사회의 생활·문화적 결핍을 해결하는 지원활동임. 이 때 참여자로서 노동조합과 지역사회는 관계가 주체와 대상이 되고 일방향적 관계가 만들어짐. 한편, 사회연대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지역)사회의 공동요구, 공동이해를 해결하는 수평적 연대관계로서 양방향적 관계를 형성함. 관계형성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공헌활동보다는 사회연대활동이 발전적이라 할 수는 있지만 사회공헌활동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는 것도 편견일 수 있음.

-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연대활동은 생각만큼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정도와 조직역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 그리고 단절된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연대의 자원이고 텃밭의 역할을 한다는 것임.

○ 발표1.(7쪽) ‘지역사회와 사회연대활동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의 해계모니전략으로서 계급내연대(고용연대, 임금연대), 계급간연대(복지연대, 생활연대, 지역연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음. 현재 상위소득 20%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조합(조합원)이 계급내연대나 계급간연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노동의 해계모니를 형성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가설인지 모르겠음.

-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조합(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 철폐, 차별해소를 주장하지만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 입장을 취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노동의 해계모니전략은 민주노조운동 성장기어나 적용가능한 프레임이라는 의견임.
- 복지연대, 생활연대, 지역연대는 노동조합 보다 시민사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앞서 나가고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사회연대는 노조의 내부혁신전략 보아야 할 것임. 사회공헌이라는 명분적 연대를 통해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조합의 혁신과 사회적 역할(책임)을 내부화하는 혁신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14.5)

- 한국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의 임금격차 수준은 고용연대와 임금연대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더라도 사업장 수준에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계급연대와 사회연대를 유기적으로 병행해야 함. 이를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의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발표1.(37쪽) 정책제언에서 제시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운영하는 사회연대센터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됨. 다만 노동조합-시민사회 모두의 준비정도와 역량수준을 점검해야 함. 주요사업의 예시를 보면, 사업 하나하나가 장기적 사업이며 상당한 재원과 전문적 관리를 필요로 함. 노조와 시민사회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관계형성을 이루고 있는지, 시민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이해와는 어떻게 부합하는지, 지역사회의 사회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조사와 오랜 공론화가 필요할 것임. 사회연대센터 건립을 위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고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센터 공간은 노동조합 자력보다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봄. (참고 : 사회운동센터 건립추진방안 연구, 공공운수노조, 20019)
- 준비정도와 역량에 과분한 사회연대를 그리면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기 보다는 실천가능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형성하고 성과를 축적하면서 좀 더 넓은 사회연대로 발전한다는 발전경로를 제안함.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생색내기하는 것과 사회공헌에 명분을 갖고 성실하게 활동하는 것과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조합원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다는 것도 유념해야 함.
- 특히, 시민사회(단체)도 활동가 기반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앞서 지역사회 활동가 양성과 확충,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참고 : 청년재단, 2019 NPO 일·경험 지원사업 사례 / 공공상생연대기금, 공익활동가협동조합 ‘동행’ 지원사업 사례)

3. 반신자유주의 대안담론과 사회연대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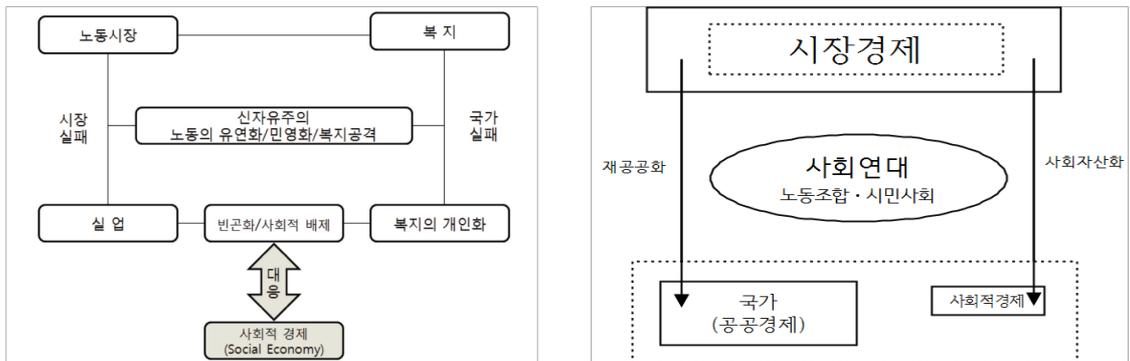
- 2차 세계대전이후 국가가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개입·참여한 것을 보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자본주의체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역시 자본주의체제 시장경제의 한계를 다시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음.
- 자유주의 시장경제 → 국가자본주의 시장경제 →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이어지는 흐름과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완전고용에 바탕을 둔 복지국가모델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임. 최근의 경제상황을 심각하고 장기적인 경제침체(노뉴멀)라고 규정하든,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라고 규정하든 간에 문제는 국가시스템과 경제체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

○ 발표2.(12쪽) 캐나다 퀘벡노동자총연맹(FTQ)과 전국노동자연맹(CSN)의 노동자연대 기금 사례는 사회연대의 좋은 롤모델이라고 봄.

- 퀘벡의 노동조합이 68년 총회에서 의결한 '제2전선(second front)'전략을 보면 "노동조합의 투쟁이 대중들의 삶과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시대적 투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 정신이 바탕이 되어 평화운동, 국제연대운동, 양성평등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6년에는 목표를 더욱 발전시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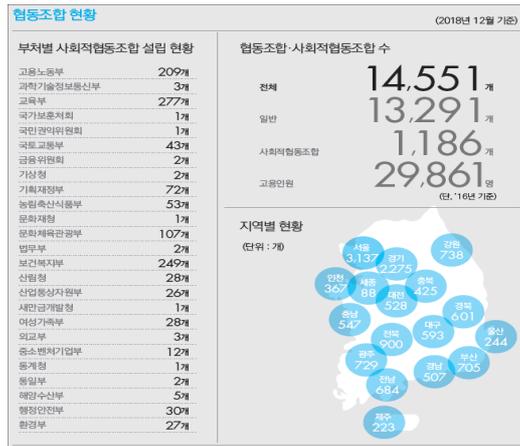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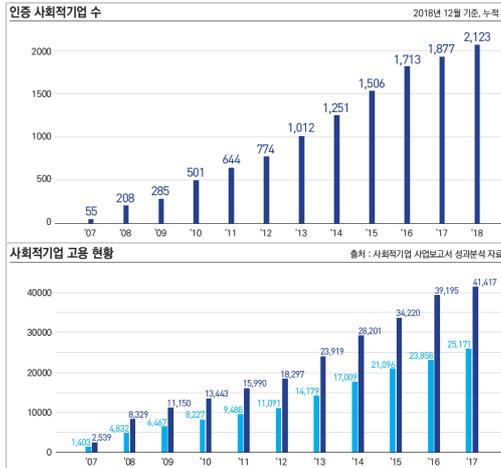
- 포괄적인 사회연대경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에 앞장선다.
-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일
- 정부가 규제와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일
- 개발과 투자부문에서의 민주화와 기업 운영의 민주화
- 고용을 증진하고 소외된 계층을 돕는 일
- 공공 서비스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일
- 지역 사회 공동체 내 연대를 이루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

○ 사회개혁 경제모델로 ‘국가(공공경제)-시장경제-사회적경제’라는 다원적 경제모델에 동의하는 입장임. 사회적경제²⁾는 생산수단(자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노동의 탈상품화가 관철되는 경제조직 또는 경제영역을 의미에서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다원적 경제는 당장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빈곤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존하는 국가(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를 조합한 과도적 대안이라 할 수 있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름과 서로 다른 개념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찾아보면 상호성, 연대의 가치, 신뢰, 협동, 민주주의 원칙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시장을 최우선하는 사회에서 일어나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사사실을 보여주고 있다.(정태인, 이수연, 2013)

- 다만, 세계자본주의 분업질서(중심부국가-반주변부국가-주변부국가)에서 반주변부 국가 지위에 있으면서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약점을 갖고 있는 한국경제가 과연 사회연대라는 권력자원으로 다원적 경제체제를 형성하고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복잡한 검토과제가 남아 있음.



-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아직 제도적 정비가 불비하여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활동을 전환하는 흐름이 뚜렷하고 청년활동가 층에서는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노동조합이 사회연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임.
- 또 하나의 새로운 움직임이 시민자산화, 공동체자산화, 지역자산화라고도 하는 사회 자산화 흐름이 있음. 지역기반 공동체(조직)이 건물 등 자산을 공동 소유·운영하고 이를 공동체에 재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커먼즈를 만드는 운동임. (김이준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19)
- 신자유주의가 공공의 자산을 사적 소유물로 만들었다면 이를 다시 시민의 것, 사회적 공유로 되돌리기 위해 사회적 금융을 활용하고 있음.

4.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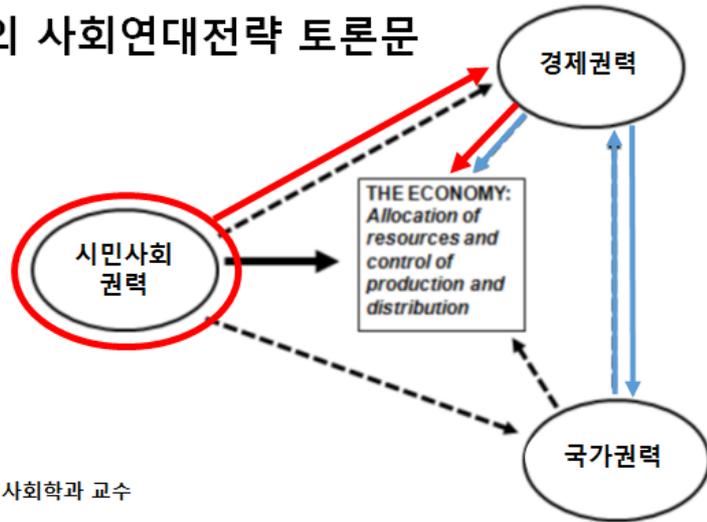
- 촛불항쟁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박근혜 퇴진으로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근본적인 사회개혁이 뒤따라야 촛불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음.(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조사, 2018.) 그러나 촛불항쟁의 성과는 정권교체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근본적 사회개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한 한계가 사회운동의 과제로 남아 있음.
 - 사회개혁을 국가(정부)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지향하는 사회개혁의 큰 그림 또는 발전 로드맵 등에 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함.
- 민주노조운동은 산별노조전략과 정치조직화전략을 추구했으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공세에 밀려 산별노조전략은 거의 무력화되었고, 정치조직화는 진보정당의 분열로 사실상 실패한 상태임.
 - 산별노조운동과 정치조직화는 목표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할 수는 있지만 대중운동으로서 동력이 상실된 상태이기에 사회연대라는 새로운 운동전략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함.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노동(자) 중심성’은 사회개혁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실력과 활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받고 있음.(손우정, 이태호, 2018). <끝>

토론5.

한국사회 사회적 연대의 맥락과 의미
:서구 노동운동의 사회적 연대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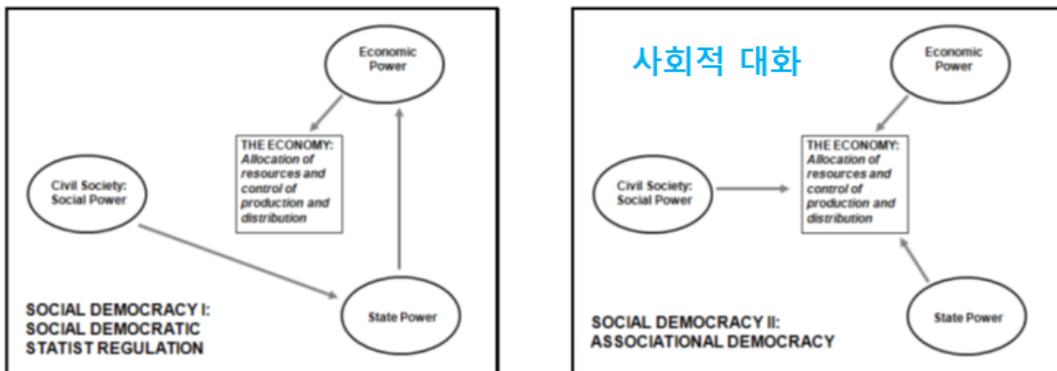
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 토론문



1

사회민주주의



이주희

2

한국사회 사회적 연대의 맥락과 의미?

서구 노동운동의 사회적 연대는 정권 창출과 연계

자본주의체제의 극복을 위한 **틈새적 전략**

이주희

3

단절적 변혁

Ruptural Transformation

틈새적 변혁

Interstitial Transformation

공생적 변혁

Symbiotic Transformation

기존연대기금 종합평가

- 정규직 조합원의 기본적인 연대감 확인
- 노동조합만 출연한 경우는 극히 드뭄: 사측은 기금 기여를 이유로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전달체계의 문제
- 기금사용목적이 제한적

퀘벡 노동연대기금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력 확대

- 퀘벡 주 사민주의 정당 지배적
- 기업별 교섭(1997년 기준)
- 노조조직률 41.4%
- FTQ - 37.3%
- CSN - 23.9%
- 사회협약의 전통



이주희

7

설립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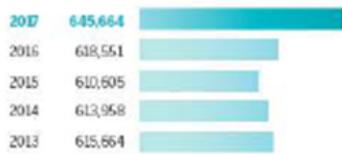
- 1982년 퀘벡 노동조합 총연맹(QFL)이 높은 실업률을 계기로 경제 대표자회의에서 제안
- 연방정부/주정부로부터 각각 1000만 달러의 기본 자금을 수혜하고 기금 조성에 유리한 세제혜택을 획득하여, 퀘벡 중소기업에 직접투자하기 위해 설계된 자본투자 연금 기금
- 캐나다 최초의 노동자 기금이자 가장 큰 벤처캐피탈 기금
- CSN은 10년 간의 오랜 논쟁 끝에 유사기금 FondAction을 설립

이주희

8

노동연대기금 투자자 프로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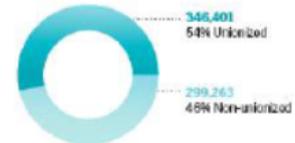
NUMBER OF SHAREHOLDERS
As of May 31



SHAREHOLDERS BY AGE GROUP
As of May 31, 2017



SHAREHOLDER PROFILE
As of May 31, 2017



이주희

9

인내자본 Patient Capital

투자 방식

- 투자하는 기업과 5~7년간 장기적 파트너십 형성
- 정관상 목표지분은 10~40%이나 보통 15-20%지분 확보가 대부분
- 투자하는 기업의 노동환경에는 적극 개입, 노동환경 면밀하게 조사, 필요 위원회에 노동자를 참석시키고 노동환경 침해 행위 시정
- 사회 감사(Social Audit: 담당자 25명)제도를 통해 기업 평가시 인적 자원을 중시하는 고유한 관점 유지
- 기업 협약을 통해 노동자 교육기금 조성

이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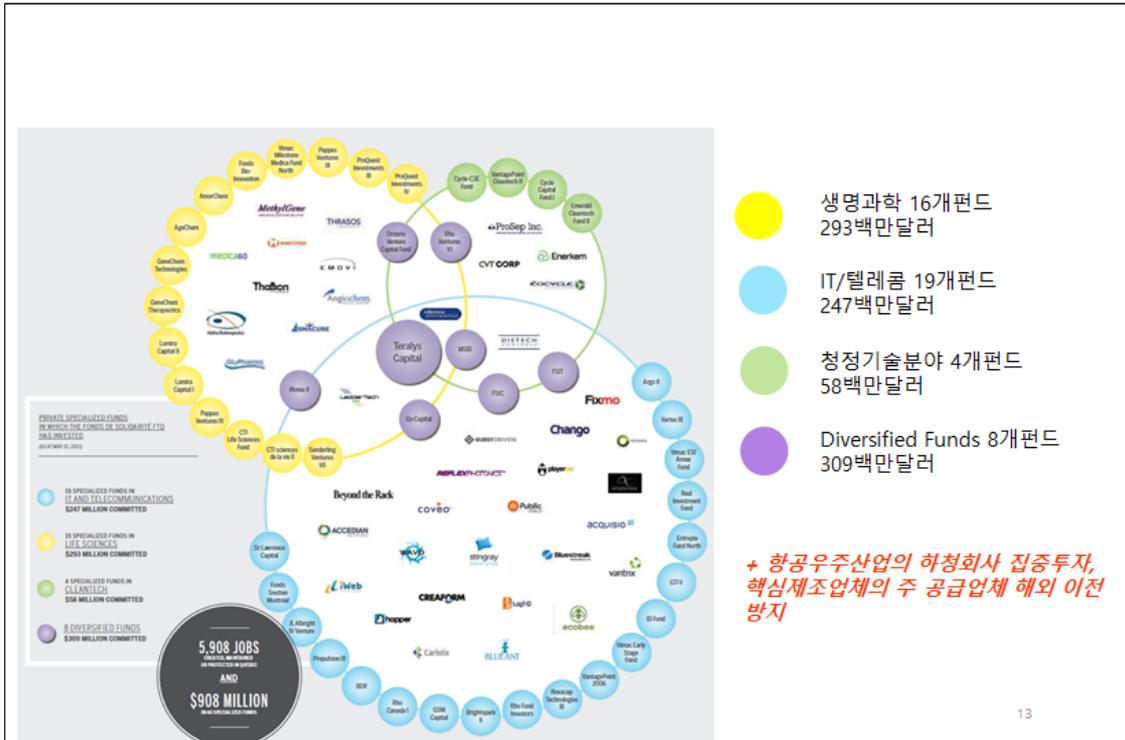
11

사회적 평가(social assess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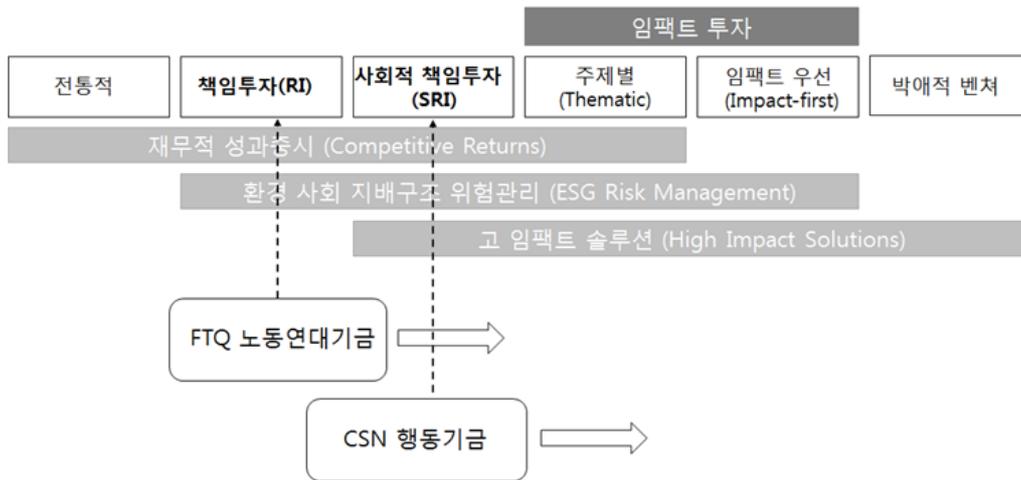
- 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기업의 운영 전반
- 경영상의 스타일
- 사용자(기업 대표) 프로파일
- 노동조건과 노사관계
-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 환경법 등과 관련된 연대기금의 원칙 존중 여부(더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 환경기준 필요)

이주희

12



13



이주희

14

노동연대기금 도입의 의의

- 사회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 중소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조직노동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상징성 확보**
- 은퇴 이후 조직노동자의 **추가 연금기능**
- 일자리 창출
-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 및 환경 기준 확산**
- 노동자에게 경영참여의 기초가 되는 교육 및 훈련 제공
- 사회적 경제를 통해 청년 협동조합 및 하우징 지원

이주희

15

노사정의 역할

- **노동:** “개인적으로 자본을 축적하려 하기보다 집단적으로 자본의 통제자가 될 수는 없겠는가?”
- **정부:** 기금수익에 대한 매우 유리한 세금 면제 혜택 제공 및 직접적 보조금 지급
- **기업:**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연대기금에 투자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지급, 노동조합 조합원 자원봉사자 노동시간 일부 면제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문 지식 공유

?

- 기존 기금의 사용목적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가능한가?
- 퀘백과 같이 소규모 지역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은? (광주형 일자리, 청년일자리)
- 현 기업연금의 문제점
- 퀘백과의 차이: 보수적인 정치, 재벌 증권/보험사 로비력

미국 노동조합의 플랫폼 협동조합주의 지원 사례



“Union Taxi Cooperative is a driver-owned taxi fleet where each driver has a personal stake in providing exemplary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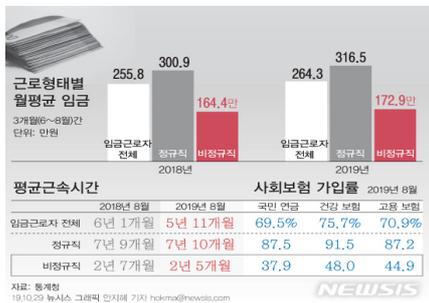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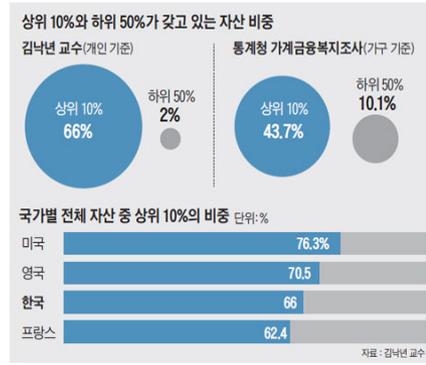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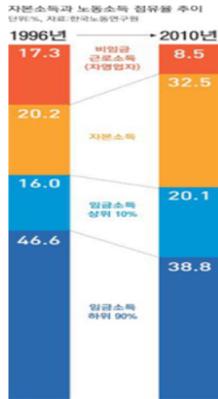
“CWA(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Local 7777”

토론6.

노동조합 사회연대전략의 의미

한석호 | 전태일재단 기획실장

1. 한국사회 불평등 지표 및 노동운동의 난제



광주 기아차 노동자 임금격차

고용 형태	평균 연봉
기아차 정규직	9700만원
광주공장 사내하청	5000만원
1차 협력사	4700만원
1차 협력사 사내하청	3000만원
2차 협력사	2800만원
2차 협력사 사내하청	2200만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4년 기준

<소득분위별 근로자 평균연봉 연봉하향액 추이('14~'15년)>
(단위: 만원, %)

소득분위(상위%)	평균연봉				연봉하향액			
	'14	'15	증감	증감률	'14	'15	증감	증감률
10분위 (0~10%)	9,287	9,452	166	1.8	6,408	6,432	24	0.4
9분위 (10~20%)	5,390	5,428	38	0.7	4,586	4,625	39	0.9
8분위 (20~30%)	4,030	4,096	66	1.6	3,600	3,640	40	1.1
7분위 (30~40%)	3,256	3,323	68	2.1	2,982	3,000	18	0.6
6분위 (40~50%)	2,708	2,754	46	1.7	2,485	2,500	15	0.6
5분위 (50~60%)	2,284	2,316	32	1.4	2,100	2,140	40	1.9
4분위 (60~70%)	1,920	1,936	16	0.8	1,787	1,800	13	0.7
3분위 (70~80%)	1,594	1,620	26	1.6	1,440	1,452	12	0.9
2분위 (80~90%)	1,216	1,273	58	4.7	959	972	13	1.3
1분위 (90~100%)	584	601	17	2.9	120	14	-106	-88.0
전체	3,234	3,281	47	1.5	-	-	-	-

• 자료: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4~'15) 원시자료

- 노동부 자료

구분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계	
2015년	임금노동자수 (%)	11,319,000 (58.1)	3,783,000 (19.4)	1,913,000 (9.8)	2,472,000 (12.7)	19,487,000
	조합원수 (%)	14,491 (0.7)	102,228 (5.3)	235,279 (12.1)	1,554,335 (80.2)	1,938,745
	조직률(%)	0.1	2.7	12.3	62.9	10.2
2016년	임금노동자수 (%)	11,434,000 (58.2)	3,750,000 (18.1)	1,993,000 (10.2)	2,458,000 (12.5)	19,635,000
	조합원수 (%)	19,200 (1.0)	130,800 (6.6)	299,531 (15.0)	1,353,696 (67.8)	1,996,881
	조직률(%)	0.2	3.5	15.0	55.1	10.3

- 노동자계급 내 계층 분단(노동 분단) 및 노동귀족 프레임 확산

2. 생존전략으로써의 사회연대전략

- 중심부노동의 특권 시대
- 쌍용, 한진 투쟁 등에서의 싸늘했던 민심, 시기와 질타
- 주변부노동자, 영세상인, 청년, 노인 등 나락으로 떨어진 삶과 아우성
-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조합운동의 추락한 사회적 영향력과 신뢰도 회복의 수단

3. 운동전략으로써의 사회연대전략

1) 사회연대전략의 범주

- 생활연대 : 희망연대노조(희망씨)의 지역생활연대
- 기금연대 : 희망씨, 공공상생연대기금, 우분투재단, 금융산업공익재단, 철도희망재단 등
- 임금연대 : 금융노조 및 금속노조(현대차노조)의 하후상박 임금전략
- 고용연대 : 부산지하철노조의 540명 신규채용 위한 370억 양보, 임금인상률 양보
- 복지연대 : 사회안전망(복지) 확충을 위한 증세 운동
- 투쟁연대 : 각종 투쟁 연대, 투쟁연대의 핵심은 사회구조 바꾸는 투쟁

2) 기금연대와 생활연대의 한계 및 의미

- 한계 : 기금연대·생활연대 그 자체로는 사회구조 변혁 및 노동분단의 해소 불가능
- 의미

※ 기금연대와 생활연대를 통해 사업장 울타리 바깥을 고민하는 노조운동, 조합원 측은지심의 회복, 평등가치의 회복 등

- ① 노동조합의 고립화와 반동화를 막는 유력한 실천
- ② 전 사회(노동운동) 차원의 ‘임금·고용·복지·투쟁’연대로 가는 인식 전환의 밑거름
- ③ 노동운동의 잃어버린 주도성과 도덕성 회복의 밑거름

